

“군공항 이전 ‘기부대양여’ 한계…국가 주도가 해답”

국회 토론회서 ‘지방정부 부담 전가 전환’ 집중 논의
국가 책임 높이고 종전부지 무상 제공 등 대안 모색

광주와 대구의 군 공항 이전사업이 지방 정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묶여 표류하고 있어 ‘국가사업’ 전환이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과 국민의힘 추호영 의원(대구 수성구, 국회부의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 주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순승광 동신대 명예교수는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군 공항 이전 해의 사례를 설명하고, 국가안보 사업으로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사회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로 인한 민간개발의 한계와 지방정부 재정 현실적 어려움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손 병예교수는 “군 공항은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그 조성과 이전, 폐쇄 등을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개발이익에 의존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지방정부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광주보다 일찍 기부 대 양여 방식에 합의하고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한 대구·경북의 경우 사업비 마련의 한계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어진 토론회서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기부 대 양여 제도는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행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며 “약 1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사업비, ‘선투자 후 회수’ 구조의 위험성, 부지 보상과 주민 반대 등 변수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이 대구 군 공항 사례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최근 대통령실 주도로 합의된 사안도 여전히 중앙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연간 예산이 8조원 수준에 불과한 광주시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과 국민의힘 추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이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무안군에 1조원의 인센티브를 제안하면 서까지 민간공항과 군 공항 동시 이전 수용을 요청한 것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은 “지자체 (민간 포함)가 막대한 자금을 선행 투자하고, 사업 기간 지연에 따른 리스크를 모두 안고 가는 구조에서 불확실성에 토대를 둔 가치를 기대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 공항 이전사업은 실현

되기 어렵다”며 “국가 주도, 지역 협력 방식으로의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토론회에서는 △이전사업의 재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정상이며, 행정과 재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조항 신설 △국방부 장관이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국가 사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가능 등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으로 민간 참여 유인 효과를 높이는 등의 기존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대한 개정

방안이 제시됐다.

한상원 회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책임지는 조직’임을 명시한다”며 “안보를 위한 전략적 시설인 만큼, 그에 수반되는 소음, 고도제한, 도시 불균형 등의 문제에 대한 조정과 이전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강사의 시행자가 되어 국가 사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가능 등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으로 민간 참여 유인 효과를 높이는 등의 기존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대한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실이 발표한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 방침은 광주와 대구 시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책 전환이다. 이제 할 일은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의지가 실행될 수 있도록 연내 특별법 개정을 발의하는 등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9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 군 공항은 1964년 개항 이후 지금까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으로 시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지난 2013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기부 대 양여의 구조적 한계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광주시가 약 10조 원을 투입해 신공항을 건설하고 국방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 개발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

이번 토론회는 60년 가까이 도심 한복판에서 소음 피해를 겪어온 광주 시민들의 숙원 해결은 물론 대구·수원 등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사업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24일 함평군 손불면 석창리에서 열린 ‘함평 월천~석창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착공식’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상익 함평군 수동 주요 내빈들이 착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남도, 함평만 해안관광 일주도로 건설 착수

월천~석창 지방도 확포장 착공…함평 미래비전 실현 첫걸음

전남도는 24일 함평 손불면 일원에서 ‘월천~석창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함평만 해안관광 일주도로 건설에 착수했다.

착공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상의 함평군수, 모정환 전남도의회 의원, 이남

오 함평군의회 의장,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숙원사업 실현을 축하했다.

전남도와 함평군은 2023년 9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서남권 대도약을 위한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공사’는 이 비전을 실현하는 첫 번째 도로 사업으로 총 3.8km 구간에 517억원이 투입되며,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함평만 해양관광 일주도로는 총 20.5km로, 그중 5.1km는 이미 개통돼 사용 중이며, 11.6km는 함평군에서 공사와 설계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착공한 3.8km 구간이 신규 개설되면 서해안의 아름다운 갯벌과 환상적

인 낙조, 넓게 펼쳐진 함평만을 만끽할 수 있다.

또한 돌머리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가 활성화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원전 재난 시 중요한 피난로 역할을 담당하며 주민 삶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지사는 “불편한 생활 여건에서도 묵묵히 지역을 지켜온 손불면 주민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함평군민의 교통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남도-성평등가족부, 성평등·청소년 지원정책 모색

원민경 장관에 농어촌·다문화 등 특수성 반영 정책지원 건의

전남도는 24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전남도를 방문, 성평등·가족정책 협력 강화와 청소년 상담·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 기반을 한층 다졌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원민경 장관과 도청에서 면담을 갖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가족정책 협력 모델 구축을 논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면담에서 △농어촌 여성취업 지원금 부족 △다문화가족 비종교 확대 등 전남의 특수성과 도민의 정책 요구를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전남도가 추진 중인 △일·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문화 확산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지원 △전남 출생기본수당 등 전남형 돌봄체계 구축 등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지역의 성평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광역가족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국가사업 전환 등 도민 삶의 변화를 이끌 주요 사업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성평등을 청년층 인구유입과 지역 발전의 선결 조건이자 미래 경쟁력의 핵심가치로 보고 있다”며 “여성

의 경제활동 확대, 가족 돌봄 안정망 강화, 폭력 예방 등 도민이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 수준을 한층 높이고 도민 삶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면담에 이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을 방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단체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지역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첫 현장행보로 청소년상담지원협회장, 청소년성문화센터장 등이 참석해 전남 청소년 상담·활동 서비스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원민경 장관은 전남도와 청소년미래재단, 관련 협회의 주요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 청소년상담사·

지도사 등 현장 종사자를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남도는 간담회에서 청소년기관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처우와 관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동반자, 성문화센터 등 4개 사업 종사자의 호봉제 적용을 건의했다. 고호봉자·경력자의 실질적 호봉제 인정과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법률과 같은 청소년기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법을 제정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민경 장관은 청소년기관과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공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검토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고, 청소년기관 종사자 처우도 개선하는 등 지역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여수 ‘스마트도시’ 중소도시 첫 인증

국토부, 스마트관광·지능형 상수도 관리 성과

전남 여수시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스마트도시 인증’에서 중소도시 부문 신규 인증을 받았다.

여수는 글로벌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과 ICT 기반 상수도 관리체계 고도화가 높은 평가를 받으며 처음으로 스마트도시 인증 지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전남 여수시 등 전국 9곳을 올해 스마트 도시로 신규 인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부터 도시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대도시(인구 50만명 이상)와 중소도시(50만명 미만)로 구분해 스마트도시 인증을 해오고 있다.

올해는 대도시 4곳(대구·안양·부천·수원시)과 중소도시 5곳(서울 성동·구로·강남·은평구 및 전남 여수시)이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았다.

올해 스마트도시 인증 심사에는 전국 지자체가 참여해 스마트 도시서비스, 기반시설 수준, 공공 역량과 혁신성 등을 중심으로 53개 세부 지표에 대한 종합 평가가 이뤄졌다.

여수시는 데이터 활용도, 시민 체감 서비스, 기술융합 기반의 도시운영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인증을 받았다.

여수의 대표 성과로 꼽힌 것은 글로벌 스마트관광 통합앱 ‘여수엔’이다. 이 앱은 관광정보와 ICT 기술을 결합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통합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지역 행사, 숙박, 음식점, 교통 등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예약·결제까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어·영어·중국어 3개 언어를 지원해 외국인 관광객 접근성도 대폭 높였다.

또 하나의 핵심 사례는 ICT 기반의 스마트 관광관리(원격감침시스템)이다. 여수시는 상수도 관리에 원격감침 기술을 도입해 도서지역과 원거지 지역에서도 현장 방문 없이 실시간으로 사용량을 측정·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 누수 감지, 이상 수요 파악 등 지능형 상수도 관리가 가능해져 시민의 음용수 안전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 것으로 평가됐다.

여수시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스마트관광·스마트 안전·도시관리 전 분야에서 기술기반 서비스를 확대하고, 생활밀착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고도화 계획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수는 관광·문화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관광 모델과 시민 생활 편의를 중심으로 한 지능형 상수도 관리체계를 구축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인증 대상으로 결정된 지자체에는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도시로 홍보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동판이 수여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1면 ‘나주 인공지능’서 계속

해융합 상용화 기술 확보와 첨단 연구 등·실험동 구축, 산업·학술 연계 위한 기반 조성이 핵심이며, 정부의 장기 에너지 전략과도 직결된 인프라다.

전문가들은 나주가 최종 선정될 경우 2050년까지 200개 이상의 기업 유입, 1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10조원 이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가 추진 중인 글로벌 AI데이터센터·국가AI컴퓨팅센터와의 연계성이 높아, 폭증하는 AI 연산 전력 수요를 뒷받침할 ‘청정 에너지 기반’을 확충했

다는 의미도 크다.

해융합 기술은 바닷물에서 얻는 중수소·삼중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태양 내부 반응과 동일한 원리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수소 1g으로 석유 8t 상당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차세대 에너지체계의 ‘궁극적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최종 입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나주가 최종 확정될 경우 광주·전남 에너지벨트는 AI·에너지 융복합 산업의 국가 거점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